

김대중의 통일 · 평화사상 *

김학재 (서울대학교)

국문요약

김대중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통일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한 인물이고, 동시대에서 가장 국제화된 감각과 세계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정치인이었다. 이 글은 김대중이 평생에 걸쳐 정립하고 현실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통일 · 평화론으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해, 그 핵심 가치들의 특성에 주목해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첫 번째는 그의 통일 · 평화론의 국내정치적 기반이 된 민주주의이다. 그에게 민주주의는 다른 모든 사상과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근본 규범 *Grund Norm*이었다. 둘째는 국제적인 감각과 비교를 통해 만들어낸 그의 한국형 통일 모델이다. 그에게 한반도의 통일이란 독일과 베트남, 북한과 한국 권위주의 정부의 통일방안과 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야 했다. 세 번째는 그만의 통일 · 평화론을 만들어내고 어떤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도전했던 창의적 낙관주의 *Creative Optimism*이다. 김대중은 기존의 통일 · 평화론과 달리 남북연합이라는 차별적인 단계와 제도를 창의적으로 설계했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도 가능성의 미래를 믿는 낙관주의를 체득하고 있었다. 김대중은 한국의 현대사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다시 반복되기 어려운 역사적 경험의 표상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 · 평화론이 그린 청사진의 최대치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김대중, 민주주의, 한국형 통일모델, 창의적 낙관주의, 남북연합.

* 이 연구는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61-A00017).

I. 들어가는 말: 평화사상가로서의 김대중

김대중(1924~2009)은 제 15대 대통령(1998~2003)을 역임한 정치인으로서 한반도의 통일·평화 문제에 관해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평생 실천한 인물이다. 그는 여타 철학자나 사상가들과 달리 현실 정치인으로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정치적 변화들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관점을 형성했고, 대통령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체제 권력구조의 정점에서 이를 실현하려 했다는 유일무이한 경험을 갖고 있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김대중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통일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한 인물이고, 동시대에 서 가장 국제화된 감각과 세계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정치인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깊은 학문적 이해는 한 사회가 그 인물이 처했던 역사적 환경과 경험, 사고방식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 중요한 결정 과정과 그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기록과 분석을 통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경험을 지혜의 공동자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주로 ‘김대중 정권’의 특정 ‘정책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권의 성격과 개혁정치의 구조적 한계들¹⁾, 대북정책으로서 햇볕정책의 특성과 장단점²⁾에 대한 당대의 관점에서의 분석이 대부분이다. 김대중 정권과 통일

1) 정태환, “김대중 정권의 성격과 개혁정치 : 모순과 한계,” 『한국학연구』, 31 (2009), pp. 387~416.

2) 김근식, “햇볕정책 2년: 평가와 전망,” 『통일시론』 제7권 (2000); 최완규, “햇볕정책의 국내정치적 제약요인분석,” 『동북아연구』 제8권 (2003); 박선원, “햇볕정책과 여론: 지속성과 변용의 관점에서 본 실증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8 권 2호 (2002); 이시형,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에서의 여당의 위상과 역할,” 『21

정책에 대한 역사적 평가³⁾가 일부 존재하지만 그의 철학과 사상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⁴⁾ 이는 오랜 냉전 분단체제의 경험과, 소위 87년 체제로 불리는 단임 대통령제가 만들어내는 특유의 정치적 분극화(*polarization*)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지만, 그럴수록 체계적인 학문적 분석과 기록, 평가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김대중이 평생에 걸쳐 정립하고 현실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통일·평화론으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해, 그 핵심 가치들의 특성에 주목해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하나의 작은 시도이다. 김대중의 통일론은 크게 열린 민족주의(*Open Nationalism*)에 기반한 ‘자주’, 적극적 평화주의(*Positive Peace*)의 관점에서의 ‘평화’, 전지구적 민주주의(*Global Democracy*)를 지향하는 ‘민주’라는 세 가지 기본 가치에 기반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자주란 통일을 포함해 민족의 모든 문제를 강대국의 결정에 맡기거나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민족 자결의 정신에 입각해 해결하자는 것이지만, 반외세 자주화로 치닫는 폐쇄적 민족주의는 경계했다. 평화란 단순히 전쟁의 부재상태라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서서 적극적 평화개념에 입각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며 비핵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 등을 포함한다. 민주주의는 일국적 차원을 넘어 제3세계 민족들도 선진국과 같은 자유와 번영, 정의를 누리고, 더 나아가 생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뜻한다.⁵⁾ 이 글은 이 세 가지 기본 가치들과 일부

세기정치학회보』, 14(2) (2004), pp. 139~168; 이경호, “김대중 정부 시기 대북정책과 국가자율성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47(1) (2007), pp. 191~213; 허태희, 윤황, “민주화 이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성향 및 전략 비교: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2(2) (2010), pp. 1~37.

3) 홍석률,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역사적 평가,” 『내일을 여는 역사』 (37) (2009), pp. 26~38; 박태균, “실패한 통일의 신화들,” 『향해문화』, 37 (2002), pp. 59~72.

4) 김삼웅, “김대중의 정치철학과 사상 탐구,” 『인물과사상』 (2009), pp. 114~126.

중복되지만, 현재적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그의 사상이 기반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가치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그의 통일·평화론의 국내정치적 기반이 된 민주주의이다. 그에게 민주주의 *Democracy*는 다른 모든 사상과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근본 규범 *Grund Norm*이었다. 둘째는 국제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한국형 통일 모델이다. 그에게 한반도의 통일이란 독일, 베트남과 다르고 북한의 연방제와 한국의 흡수통일과 다른 점진적 과정이었다. 세 번째는 그만의 통일·평화론을 만들어내고 어떤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도전했던 창의적 낙관주의 *Creative Optimism*이다. 김대중은 기존의 통일, 평화론과 달리 남북연합이라는 차별적인 단계와 제도를 창의적으로 설계했고, 어떤 비관과 어려움에 직면해도 가능성의 미래를 믿는 낙관주의를 체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김대중의 민주주의, 한국형 통일모델, 창의적 낙관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아래에서는 각각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II. 민주주의와 평화 : ‘선민주 후통일에서 글로벌 데모크라시로’

1924년에 태어난 김대중은 일제 식민치하와 태평양전쟁,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과 냉전, 군부 권위주의와 민주화, 세계화와 탈냉전이라는 한국

5)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한울, 1995), pp. 23, 33.

현대사의 거시적 변동을 모두 경험했다. 박정희가 주로 식민지배, 독립 국가건설과 냉전대립이라는 시대를 반영한 인물이었다면, 김대중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라는 시대의 파도’를 탄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의 국내 정치 경험, 국제적 경험, 그리고 향후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활동의 근간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경험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은 오랫동안 정치 정당생활을 했고, 특히 야당 정치인으로서 경험을 쌓았다. 이미 30대 초반부터 다양한 잡지와 언론에 기고하며 정치적 목소리⁶⁾를 내온 그는, 1950년대 장면, 신익희, 조병옥, 백남훈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신파계 인물로 정치에 입문하였다. 1956년, 33세의 나이로 민주당에 입당한 그는 이듬해 민주당 중앙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고, 4·19 직후 젊은 정치인들이 각광을 받는 상황에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의 선전부장 겸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젊은 정치인 김대중은 그때부터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세상에 알려지고 주목을 받았다. 그는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목포에서 출마하기 시작한 이후⁸⁾, 세 번 낙선했고 마침내 1961년 5월 인제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바로 5·16쿠데타가 발생하여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했다. 1960년대 정치인 김대중은 목포에서 연달아 당선되면서 보수 야당의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하였다. 당시 그는 민주당의 정책이념을 만들고, 야당으로서 이념 체계와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역할을 했다. 김대중은 비교적 선명하게 군사정권에 반대한 야당지도자였다. 1967년 국회의원 선거 때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의 지역구이던 목포에 거물급 여당 인사

6)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연보 (1924~2009) I』 (서울: 시대의 창, 2011), pp. 28~29.

7) 위의 책, pp. 30~40.

8)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1, 2』 (서울: 삼인 2010). p. 89.

를 전략공천하고 그를 낙선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김대중은 한 일회담 반대운동 과정에서 매우 온건한 편에 속했다. 그가 군부 독재 세력에게 위협한 인물로 지목된 것은 1971년 대통령 선거 때문이었다.⁹⁾

1971년은 정치인으로서의 김대중의 생애 경로가 달라지게 되는 결정적 국면이었다. 1969년 9월 14일 박정희 정부는 삼선개헌안을 통과시켜 장기집권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신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던 상황에서 1970년(47세) 1월 27일 김대중은 『국제신보』에 ‘40대 기수론’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키자 김영삼, 이철승, 김대중 등 패기 있는 40대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어 강력한 대야투쟁을 전개하여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였다.¹⁰⁾ 1971년 신민당의 당내경선을 통해 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대중은 대선후보로서의 굼직한 정책들을 내놓고 대중적 인기를 끌며 박정희와 맞대결하면서 예측을 불허하는 일대 접전을 벌였다.

그는 1970년 10월 16일 대통령 후보로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토예비군의 폐지, 대중 경제 노선의 추진, 미중소일 4대국의 한반도 전쟁 억제 보장,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 및 평화 통일론,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교역 추진, 초중등학교의 육성회비 징수 폐지, 사치세 신설, 학벌주의 타파, 이중곡가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공약 하나 하나가 엄청난 파급력을 지녔지만, 특히 향토예비군의 폐지와 4대국 안전보장론, 남북 교류와 평화통일론, 대중경제 노선은 국민들이 폭발적 관심을 보였다.”¹¹⁾

4대국 안전보장론은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인 미국, 소련, 중국,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9) 홍석률,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역사적 평가,” p. 30.

10) 『김대중 연보 I』, pp. 221~233; 『김대중 자서전 1, 2』, p. 199.

11) 『김대중 자서전 1, 2』, p. 206.

남북 교류와 평화통일론은 계속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 오던 정부 여당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김대중은 1971년 4월 27일 제 7대 대선에서 패배했고, 이어서 개최된 5월 총선에서 신민당이 패배하며 국가와 사회 사이의 정치적 균형이 무너졌다. 1971년 12월 6일 박정희는 통일준비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같은 이유로 1972년 10월 17일 유신을 선포했다.¹²⁾ 유신을 선포했을 당시 김대중은 치료차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김대중은 해외에 체류하며 반독재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박정권과 맞서 싸우려고 결심했다... 나는 나라 밖에서 자유롭게 내 의사를 피력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론에 호소하자. 독재 정권의 해악을 세계에 알려 박 정권과의 유착을 차단하자. 그러면 국내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유신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다.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해외에서 싸우자. 민주 투쟁을 위한 국제적인 조직도 결성하고, 생각과 뜻이 같은 교포들과도 함께 투쟁해 나가자.”¹³⁾

당시 김대중은 일본 신문, 잡지, 텔레비전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상황을 알렸고, 일본의 다양한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과 교류하며 국제적인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다.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1973년 7월 6일 교민들을 연결하여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를 창립했다.¹⁴⁾ 왕성한 활동을 하던 그는 1973년 8월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일본 도쿄에서 납치당했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일본과 미국에서 활동한 그가 구축한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고, 그것이 일본과 미국의 정부, 정치인, 언론, 관료, 지식인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 결정적 계기였다.¹⁵⁾ 예컨대 당시

12) 『김대중 자서전 1, 2』, pp. 228~246.

13) 『김대중 자서전 1, 2』, p. 270.

14) 『김대중 연보 I』, pp. 286~307.

『세카이』를 중심으로 결합된 일본 지식인들은 한국의 민주화에 관심을 갖고 김대중 구명운동 뿐 아니라 한일 시민사회 연대를 추구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¹⁶⁾

이렇게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통령후보로서의 성공적인 데뷔를 한 김대중은, 이후로 오랫동안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대선후보가 된 김대중은 박정희를 비롯한 경쟁자들로부터 이후 십여 년간 극도의 탄압을 받게 된다. 1973년 납치에서 풀려난 그는 이후 6년간 옥고를 치렀고, 55차례 가택연금을 당했다. 특히 12·12쿠데타와 5·18광주민중화운동의 유혈진압을 통해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에게 사형까지 선고하였다.¹⁷⁾

이런 큰 고난을 겪게 되기 전까지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인 수준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사업가 출신으로서 노동문제에 대해 비교적 진보적 견해를 갖고 있었고, 젊은 세대 정당 정치인으로서 실력과 정책으로 정당성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소 활동에 참여하고 스스로 연구소를 설립해 정책을 만드는 훈련을 해왔다.¹⁸⁾ 하지만, 유신체제가 도래한 이후 민주주의와 국제연대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생명마저

15) 『김대중 연보 I』, pp. 304~329.

16) 김영미, “외교문서를 통해서 본 김대중 납치사건과 한·일연대,” 『한국근현대사 연구』 58 (2011), pp. 214~251.; Lee, Misook, “The Japan-Korea Solidarity Movement in the 1970s and 1980s: From Solidarity to Reflexive Democracy,” *The Asia-Pacific Journal*, Vol.12, Issue 38, No. 5, September 22, 2014.; 鄭 根珠 韓國民主化支援運動と日韓關係：「金大中内乱陰謀事件」と日本における救命運動を中心に（後藤乾一教授退職記念号：アジアのなかの日本 日本のなかのアジア），*アジア太平洋討究* (20), 359~371, 2013-02.

17) 홍석률,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역사적 평가,” p. 31.

18) 그는 목포에서 서울로 올라온 직후 한국노동문제 연구소에 상근하며 노동문제에 대한 다양한 진보적글들을 출판했고, 1964년에는 국제문제에 대한 동향 파악을 위해 한국 내외문제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런 경험은 이후 대통령이 되어 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이어진다. 『김대중 연보 I』, pp. 28, 29, 『김대중 자서전』, p. 90, 163.

있을 수 있었던 경험을 통해 그는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하며 근본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

김대중이 보기에 통일이란 주제는 금기가 많았고, 정략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1960년대부터 그는 “외부 자극이 있을 때만 발작처럼 일어나는 통일논의는 건전하지도 않고 그것이 통일에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고 보았다.¹⁹⁾ 1971년 박정희 정권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당시 미국과 유럽을 방문 중이던 그는 “민주화 요구가 억누를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자, 박정권은 영구 집권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북한을 끌어들이 긴장감을 조성”한다고 판단했다. “냉전의 물줄기를 끌어와 독재를 획책하는 박정권이 참으로 한심스럽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1972년 유신 이후에 그는 박정희 정권이 통일을 빌미로 민주 정치를 짓밟고 있고, 통일 세력을 용공분자로 몰 수 있다는 이유로 통일을 우선시하는 운동에 반대하는 ‘선민주, 후통일’ 원칙을 수립한다. “박정희 정권 교체 없이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²⁰⁾

통일보다 민주주의를 우선시하는 그의 입장은 수많은 해외 언론들과의 인터뷰, 강연,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확대되고 발전되어갔다. 처음에 그의 민주주의 이해는 군사 독재에 반대하는 것,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에 머물렀지만, 점차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같은 다른 정치 이념을 포괄하는 제도로서, 한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인 책무를 지는 신념으로서,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과 생명에게도 확대되는 사상으로 진화했다.

예컨대 1986년 9월 하버드 대학 국제문제연구소 방문시 그는 강연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지금 망명까지 하면서 한국의 민주

19) <조선일보> 주최 좌담회 발언, 『김대중 연보 I』, p. 117.

20) 『김대중 연보 I』, pp. 256~257, 307~311.

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민주주의는 서구 사회의 산물입니다. 한국의 전통에는 민주주의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한국은 유교의 영향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 김대중은 아시아와 한국의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유산을 찾을 수 있다며 반박했다. 첫째, 동학의 인내천 사상처럼 역사 속에 민본정신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최근 한국의 100년의 역사를 보면 3·1운동, 60년의 4·19, 79년의 부마항쟁, 80년의 광주항쟁까지 민주화 운동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며, 셋째, 보수적인 전통으로 여겨지는 유교의 근본정신에도 민본주의 원칙이 있음을 설파했고, 넷째, 한국의 교육수준이 세계 정상급이어서 향후 민주적 시민성의 발전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렸다.²¹⁾

아시아에 민주주의의 뿌리와 전통이 깊다는 그의 견해는 당시 아시아적 가치와 발전모델을 논하며 민주주의는 서구의 가치이며, 아시아 국가는 나름의 가치와 전통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고 주장했던 싱가포르의 리관유 수상의 입장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었다. 김대중은 문화적 차이를 본질주의화하고 마치 운명처럼 여겨 아시아에선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는 리관유의 주장을 반박했다.²²⁾

이렇게 김대중의 민주주의 인식은, 한국과 아시아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통과 경험을 긍정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낙관적 이해로 발전했고²³⁾, 탈냉전 이후 국제적 학술 교류를 통해 더 확대되어 전지구적 민주

21) 『김대중 자서전 1, 2』, pp. 437~438.

22) "Is Culture Destiny? The Myth of Asia's Anti-Democratic Values," *Foreign Affairs*, 1994 11/12월호.

23) 정근식은 이런 의미에서 1998년 김대중 정권의 수립을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모델을 세우고 아시아의 민주화 역사를 말할 때 한국을 중심에 두게 한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근식, "정권교체, 민주주의 그리고 '광주,'" 『당대

주의, 생명철학으로 나아갔다. 1987년 대선에서 양김의 분열로 패배한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방문해 영국의 여러 학자들을 만났다. 당시 그는 앤서니 기든스, 존 던 교수와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 국민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를 차원을 달리하여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서로 뜻을 같이 했다.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자유와 정의가 깃든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인류의 형제인 모든 생명불이에게도 평화가 깃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은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나무, 풀, 동물, 물고기, 날짐승, 공기, 흙)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전 지구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든스 교수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코스모폴리탄 데모크라시²⁴⁾’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대중은 글로벌 데모크라시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²⁵⁾

김대중이 생각하는 전지구적 민주주의는 일국적 측면을 넘어 국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책임성을 지는 일이었다. 각 국가 내에서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고, 나아가 제3세계 민족들도 선진국과 같은 자유와 번영, 정의를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더 근본적으로는 생명체의 보전을 위해 생명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이때 아시아적 민주주의의 포용성이 서구식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동학의 인내천 사상, 문민 주도의 정치, 문화적 전통, 과거제도의 개방성, 언론 자유 존중, 타민족을 침략하지 않은 평화주의, 교육에

비평』(1998), pp. 124~143.

24) 코스모폴리탄 민주주의는 기든스가 재직했던 런던 정경대학LSE를 중심으로 David Held, Richard Falk, Mary Kaldor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자유 민주주의의 전지구적 확대와 지구적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이다. David Held, *Democracy and the Global Order*, (Cambridge, Polity Press, 1995); 이에 관한 다양한 리뷰와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Daniele Archibugi (2004), “Cosmopolitan Democracy and its Critics: A Review,”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0(3): 437~473.

25) 『김대중 자서전 1, 2』, pp. 573.

대한 열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교훈 등이 그 근거였다. 그가 보기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시아적 사상과 전통에 뿌리를 둔 새로운 민주주의, 전지구적 민주주의로 한 단계 높은 경지로 올라설 때 비로소 이상이 실현될 것이었다.²⁶⁾

그는 탈냉전 이후 세계사의 흐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중심에 둔 해석을 했다.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냉전의 양대 이념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91년 9월 17일 모스크바 대학 초청 강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날 공산 국가들이 몰락한 것은 그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하지 않은 독재적 사회주의가 패배한 것입니다. 사회주의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몰락한 나라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나라들 역시 독재 자본주의에 매달려서 민주주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문제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다 같이 성공했습니다. … 20세기는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독재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의 역사입니다.”²⁷⁾

이처럼 김대중은 1971년이라는 결정적 국면을 거쳐 민주주의를 가장 근본적인 규범으로 체득했고, 이를 한국과 아시아의 민주주의 전통과 가능성을 보는 관점으로, 냉전 양대 이념을 조화시키는 제도로, 전지구적 책임성을 지는 보편적 가치로, 생명과 평화를 포함하는 생태사상으로 확대했다.²⁸⁾ 이는 야당의 신진 대통령 후보로서, 국제적 민주화운동 연대

26)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p. 33~34.

27) 『김대중 자서전 1, 2』, pp. 540.

28) 김근식은 이를 국제정치학이 제기하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로 해석하고 있다. 김근식, “탈냉전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평화연구』,

의 리더로서, 민주화 이후에도 유력 대통령 후보로서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상적 담론을 학습하고, 다양한 국제적 소통을 통해 한국적, 아시아적 보편성과 가능성을 확인해간 이상주의자의 형성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Ⅲ. 국제적 안목과 한국적 통일이론의 형성

김대중은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30년에 걸쳐 숙성된 통일관”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통일론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그는 1960년 12월 민주당이 앞으로 통일문제를 다룰 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유당과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이론적인 공세를 펼칠 것을 주창했다. 당시 그의 통일론은 자유당에 비해서는 더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이지만,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중립통일론이나 남북 교류론에 대해서는 인기영합주의라며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입장은 1960년대 초반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논의되자 이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바뀌기 시작했다. 국제적 조류가 바뀌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1964년에 이르면 그는 통일문제에 대한 주장을 위협한 사상으로 간주하거나 회피해선 안 되며, 강경일변도 보다는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며, 통일을 위해 경제력 신장 등의 대책 등 포괄적, 거국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²⁹⁾

18권 2호,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2010년 가을.

29)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 281.

1964년 11월 『세대』지에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하여 통일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려 했다.³⁰⁾ 특히 1960년대 초반 베를린 위기와 쿠바미사일 위기 이후 서독을 중심으로 동독의 주권을 불인정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자 김대중은 1966년부터 한국 정부의 냉전적 입장 고수가 '국제적 조류'에 어긋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대중은 정부의 통일 정책이 부재하다고 비판했고,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공산국가들과 교류를 시작하자며 실리 외교를 주창했다.³¹⁾ 유엔 내부에서 점차 자유주의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세력판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도 근거가 되었다.³²⁾

이는 1950년대 이후 북진 통일, 1960년대의 승공 통일론이 북한의 적화통일론과 대립하던 당시 정치 상황에서 박정권이 설정해놓은 통일론의 수위를 훨씬 넘는 발언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의 주장을 '북한 공산주의 집단과 우두머리인 소련, 중공과 교류하자'는 것이라며 용공으로 비난했다.

이처럼 김대중의 초기 통일론은 당시의 국제적 흐름을 민감하게 관찰한 산물이었다. 야당 주요 정치인으로서 그에겐 다양한 국제 연수 기회가 주어졌다. 예컨대 1966년 2월 야당 정치인으로서 미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으로 떠나, 3개월간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런던, 뉴델리, 홍콩, 도쿄를 방문했다. 5월 27일에 귀국한 그는 "정부는 지금 세계가 걸어가고 있는 정반대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어요. 외국의 변명을 볼 때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정을 생각하고 통곡하고 싶었습니다"라고 소회

30) 『김대중 연보 I』, pp. 61~64; 『김대중 자서전 1, 2』, p. 166.

31)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세계사의 대전환과 민족 통일의 방략』 (서울: 한길사, 1993).

32) 『김대중 연보 I』, pp. 151~152.

를 밝혔다.³³⁾

국제적 데탕트 조류를 민감하게 지켜보던 김대중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4대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 보장’, ‘남북간의 평화 교류 등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점진적인 평화 통일’을 본격적으로 제창했다. 향토예비군 폐지나, 4대국 안전보장론, 남북 교류론에 대한 폭발적인 대중적 지지를 경험한 김대중은 1971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와 귀국 보고 강연회를 통해 보다 체계화된 형태의 ‘3단계 통일방안(평화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을 국민 앞에 제시하였다. 당시 맥락에서 ‘3단계 통일방안’은 통일 의지를 결여한 당시 정부를 비판하며 긴장 완화와 전쟁 방지를 통한 평화 공존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아울러 그는 남북간 기자 교류, 체육 문화 분야 교류를 비롯, 사회 각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여 평화 통일을 실현하자고 역설했다. 당시 김대중의 주장은 파격적인 것이었지만³⁴⁾, 이 시기는 정확히 서독에서 1969년 빌리브란트가 총리가 된 후 동방정책 *Ostpolitik*을 표방한 접근을 통한 변화, 교류 협력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김대중은 1972년 7월 서울 외신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을 주장하였다. 당시 고조되어 있던 국제적 화해 무드를 일찍 간파하여 나온 진취적인 발상이었다.³⁵⁾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선포한 후 김대중은 오랜 기간 국제적 민주화 투쟁과 투옥, 가택연금 등을 거치며 ‘선민주, 후통일’ 원칙을 고수하는 기간을 거치게 된다. 박정희 정권이 붕괴한 후에도 전두환 정권기에 사형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고난의 시

33) 『김대중 연보 I』, p. 162.

34)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p. 278~279.

3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 285.

기를 보낸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 국내외에서 숙고의 시간을 보내며 통일론을 보다 발전시키고 체계화하게 된다.

1980년대에 김대중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며 한반도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해 제시한 통일방안에 보다 구체적인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통일의 제도적 접근을 모색했다. 이 시기부터 그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의 길을 열기 위해 연방제를 만든다’는 새로운 구상을 그려가기 시작했다. 완전통일로 가기에 과도적으로 연방제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당시 김대중은 공화국 연방이 영연방 *Commonwealth* 형태와 비슷한 것으로 보았으나, 느슨한 상징적 연방기구화에 평화 공존과 교류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었다.³⁶⁾

이렇게 통일 이전에 과도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연방제에 대한 검토를 하며, 김대중의 통일론이 틀을 잡아갈 때, 노태우 정부의 1988년 7·7선언이 발표되었고 북방정책이 추진되었다. 한국은 구동구권 국가들과 수교를 했고, 1991년엔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다. 김대중은 이 시기 국가연합단계에서 연방제로, 완전 통일로 이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1990년대에 3단계 통일론을 완성하는데, 1991년 4월에 발표된 남북공화국연합제 통일방안은 기존에 ‘느슨한 연방단계’라고 표현한 것을 ‘남북연합단계’라고 명명하고 확립시켰다.³⁷⁾

1990년대 김대중의 통일론이 완결된 것은 1994년 1월 그가 염원해왔던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을 설립하면서부터이다. 그의 3단계 통일론을 완성하기 위해 임동원 사무총장, 운영위원으로 김남식, 김성훈, 라종일, 박종화, 백경남, 한상진, 재단 연구위원으로 박건영, 박병석, 이강래, 이석수, 이성봉, 최성, 하상식, 함인희, 황주홍 씨가 참여했고, 여러 분야

36)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p. 286~288.

37) 위의 책, pp. 280~289.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1995년 8월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을 출간했다.³⁸⁾

3단계 통일론은 통일의 3대 원칙을 자주, 평화, 민주로 설정하고 있고, 통일을 3단계로 설정하여, 1단계 남북연합, 2단계로 남과 북의 지역자치 정부로 구성된 연방제, 3단계로 중앙집권 혹은 여러 개의 지역자치정부를 포함하는 세분화된 미국, 독일식 연방제로 완전통일되는 것을 지향했다. 이렇게 단계론적으로 통일론을 만들게 된 것에는 통일과정이 2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 과정이란 것을 인식하고, 이 과정을 평화롭게 관리할 역량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현실주의적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판단에는 독일의 통일 후유증에 대한 그의 해석이 영향을 주었다.

김대중은 1990년대 초반 영국에 머물며 독일을 세 번 방문했는데, 정치적 분단이 청산되었지만 내부의 경제적, 사회적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런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 적어도 30년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통일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했다. “동독 사람들은 일종의 물신주의적 환상을 가졌다. 통일이 되면 서독의 풍요가 절로 넘어올 것이라 생각했다. 통일의 대가는 혹독했다. 생각지 못한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생겨났다. 자생력 없는 동독 기업은 거의 문을 닫았고, 동독 경제는 회복 불능의 파국을 맞게 되었다.” 따라서 조급해서도, 흡수 통일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든 통일만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었다. 분단국가가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합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독일과 비교했을 때, 남북간에는 전쟁을 치렀고,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증오하며 살아왔다. 그러다 갑자기 통일을 한다면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³⁹⁾

38) 『김대중 자서전 1, 2』, p. 600.

김대중은 베트남과 독일의 사례를 늘 비교했다. “우리의 통일은 수백만 명의 남북 민족이 희생된 베트남식 무력통일 방법은 절대로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극단적 갈등을 면할 수 없는 독일식의 흡수통일도 배제해야 합니다.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통일의 대원칙으로서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방향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⁴⁰⁾

이렇듯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은 1970년대 초반에 등장했을 때에는 호전적인 냉전 대립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적대적인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호 인정에 기반한 평화 공존을 먼저 이루고, 그에 기반해 평화로운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고, 점진적으로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이런 사고는 서독 동방정책의 방침 *rationale*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세계의 흐름에 대한 그의 국제적 안목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통일론은 점차 정교해졌다. 문제는 북방정책을 추진한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과, 오랫동안 ‘연방제’라는 개념으로 통일론을 선점해온 북한의 통일방안과 차별화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베트남이 무력 통일을 이루고, 독일 통일이 현실화되자 이런 사례들과 비교하며, 한국적이면서도 민주적인 통일 방안을 마련해 나갔던 것이다.

39) 『김대중 자서전 1, 2』, pp. 575-576.

40) 『김대중 전집 10권』, p. 4.

IV. 창의적 낙관주의: 남북연합과 변화 가능성

베트남과 독일, 김일성과 노태우의 통일방안과 차별화된 한국형 통일 모델은 1995년 무렵에 완성되었다. 여기엔 기존의 통일방안과 차별적인 창의적 요소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남북한 화해,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남북연합(제1단계)을 특히 중시했던 것이다. 영어로는 The Korean Commonwealth라고 칭한 남북연합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의 영어 표기가 Koryo Confederal System인 것을 염두에 두고, 독일식 연방제 Federal system보다는 영국식의 느슨한 자유주의 국가간 연합을 참조함으로써 용공 시비를 피하고 자유주의적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호칭을 둘러싼 논쟁 자체가 냉전적 대립과 조응하는 한국의 분극화된 정치지형의 산물이지만, 여기서는 이런 제도적 디자인 자체가 갖고 있는 창의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국가 연합제는 북한이 1960년대부터 제기해온 연방제 통일안과 노태우 정부가 제기한 한민족공동체 통일안과의 차별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김일성은 1960년부터 남북 정부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만, 두 정부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해 정치적 통합을 제외한 경제문화 협력을 추구한다는 의미의 남북연방제를 제안했다. 1970년대에는 데탕트의 분위기 속에서 더 적극적인 고려연방제 통일안을 제시했으나, 80-90년대로 들어서며 좀 더 방어적으로 정치적 제도 단일화를 거부하며 상호 체제의 보존과 공존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고려민주공화국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제시했다.⁴¹⁾

41)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2001-08: 제 2차 정상회담 대비 남북한 통일방안 분석』, pp. 4~17.

이에 비해 한국정부는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오래 지속된 분단의 현실을 인정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도기적 통일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노태우 정부는 1970년대부터 김대중이 제시해온 3단계 통일론과 그 초기 단계인 공화국연합제⁴²⁾, 남북연합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개념을 통일방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의 통일론의 1단계가 교류 협력을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하나의 통일헌법하에서 남북의 완전한 통합과 통일을 이루려 한다는 점에서, 유럽 통합의 모델로 여겨지는 시장, 안보 중심의 통합인 기능주의 *functionalist* 이론의 접근에 기반해 궁극적으로 하나의 중앙정부로 통합된 국가를 수립하려 한 것이다.⁴³⁾

하지만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은 정치적 제도 단일화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는 북한의 입장과, 남북연합 단계를 거치지만 기능주의 이론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수립하려는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일종의 중재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소위 독일식 흡수통일과 베트남식 적화통일과 차별화된 한국식 통일론의 성격을 띤 것이다.⁴⁴⁾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통일에 대해 소극적 입장으로 돌아서고, 한국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되면서 입장이 상충하고, 그 사이에 체제의 이질화와 대립이 더 오래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시적이고 수사적인 통일논의보다는 더 적극적인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점차 한반도의 통일에 회의적이고 소극적이 되어가던 주변 국가들에 한국의 이해관계와 통일방안을 설득하고, 여러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중재해야 했다. 더구나 냉전으로 형성된 동북아시아의 지정

42) 김대중, 『공화국연합제』 (서울: 학민사, 1991).

43) 『통일정세분석 2001-08』, pp. 17~21.

44) 보다 상세한 비교는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 48. <표 1-1> 남북한 정부의 통일방안과 3단계 통일론 비교.

학은 늘 제로섬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남북관계가 적대적이 되고, 남북화해를 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중이 가까워지면 일본이 견제하는 상황이었다.⁴⁵⁾

이런 상황에서는 보다 장기적으로 통일 과정을 매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즉 김대중은 오히려 남북 연합을 먼저 창설함으로써 이 제도 *institution*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 공존을 이루고, 평화 교류를 촉진하며, 통일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자체를 평화롭게 관리하려 했다.

남북 연합이란 “남과 북이 현존 상태 그대로 상이한 이념과 이질적인 정치, 경제 체제 및 두 정부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력기구를 형성하여,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통합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했다. 이는 분단 구조의 영구화를 지향하는 선린우호관계가 아니라 ‘통일 지향적 특수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의 소산이다.⁴⁶⁾

남북연합의 주된 임무는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3대 행동 강령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먼저 평화 공존은 남북한을 상호 인정, 체제 공존을 도모, 정치적 신뢰 구축, 무력 대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평화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남북 연합의 두 번째 임무는 평화교류인데, 이는 남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촉진시켜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에 전력을 다하며, 통일을 향한 징검다리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임무는 평화 통일인데, 통일의 기초가 마련되어 연방으로의 진입을 모색하게 될 때, 힘에 의한 무력 통일이나 우세한 경제력을 이용한 흡수 통일의 가능

45) 2008년 7월 3일, 계간 <역사비평> 정부 수립 60주년 기념 인터뷰 『김대중 전집 I 제10권』, p. 435.

46)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 36.

성을 배제하고, 점진적이고 민주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통일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연합은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연방제 통일로 진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실행하는 기구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북연합은 3대 행동강령을 구현하기 위해 6대 과제를 실천하기로 되어 있다. 첫째, 남북간의 화해, 협력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축소 지향적 군사력 균형을 달성하여 평화 공존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민족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여 민족 경제의 통일적, 균형적 발전과 민족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 문화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성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 모색하는 것이다. 다섯째, 통일을 저해하는 남과 북의 법규 정비이다. 여섯째, 평화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부문이다.

남북연합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남북연합 정상회의, 상설 대의 기구로서 남북연합회의, 정책 집행기구로서 남북연합 각료회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남북연합회의는 남북 각지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남북 동수로 대표를 선출해 구성한다.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제로 이뤄진다. 이는 이질적인 사회 집단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의사 결정 방식으로, 종교, 인종, 언어, 문화적 이질성과 갈등구조를 갖고 있는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치 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원리를 협의적 모델 *Consociational model*에서 찾고 있다.⁴⁷⁾ 남북연합회의가 통일 헌법을 제정하고, 반통일적 법률

⁴⁷⁾ Lijphart, Arend, *Democracies: Patterns of Majoritarian & Consensus Government in Twenty One Count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Lijphart, Arend,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을 개정 내지 폐지하며, 추후 연방 의회를 구성한다.

남북연합하에서 평화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군비 통제, 남북한 평화공존의 국제적 보장이라는 세 가지 큰 과제가 있다. 먼저 평화협정은, 부정적 평화의 기준에서 단순히 전쟁 상태 종식 선언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긍정적 평화의 개념에 기반해 비무장지대 처리 방안, 군사적 적대행위 방지 조치, 남북간의 축소지향적 군사력 균형, 군사정전위, 중립국감시위의 대체 방안, 국제적 평화보장 조치 등의 포괄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⁴⁸⁾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남과 북이 현 정전 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정전 협정 체결의 직접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추인하여 지지 선언을 한 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 보장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차선의 방안으로 남북한, 미국, 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4자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다. 이때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미 간의 문제라는 원칙을 견지한다.⁴⁹⁾

남북연합 체제는 경제적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남북간의 경제 교류 협력에는 다섯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민족경제 공동체'의 형성과 융성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교역 제한을 철폐하고, 상품과 자본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며, 대외 공동 통상정책을 실시하는 단계까지 발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재정 · 통화 · 사회복지 등 경제 정책까지 조정하면서 경제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은 정경 분리 원칙에 따른다. 경제 교

(Yale University Press, 2012).

48) 김대중의 통일론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남북연합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갖는다는 점에서 평화 프로세스와 교류협력, 통일과정 등을 모두 병행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49)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p. 81~101.

류 협력은 경제의 원리에 의해 추진되고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이다. 상품의 다양화, 상품 주기 단축, 다품종 소량 생산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 넷째, 속도와 양을 유연하게 조절해가며 협력하고, 다섯째, 환경친화적 교류 협력을 한다.⁵⁰⁾

이렇듯 남북 연합은, 남북관계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교류 협력을 촉진하며, 통일 과정을 매개하는 복합적 과제를 수행할 가장 강력한 제도적 해법 *institutional solution*으로 구상된 것이었다. 일시적인 회담이나, 임시적인 조치와 합의로는 수십년간 지속된 분단과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안된 해법이었을 것이다.

3단계 통일론을 완성한 후 1998년에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2003년까지 5년간 자신의 핵심 과제인 통일 정책을 현실화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역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이후 다양한 분야의 남북대화가 개최되어 2003년 1월까지 총 60차례의 회담이 열렸다. 장관급회담 등 정치 분야 13회, 군사회담 17회, 경제 분야 21회, 적십자 등 사회분야 9회를 통해 남북간 공동보도문 18건, 합의서 22건이 채택되었다.⁵¹⁾

퇴임 이후에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그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결코 굽히지 않았다. 그는 퇴임 이후에도 특히 통일의 경제적 전망에 대

50)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pp. 151~175.

51) 통일부, 『대북정책 4년 평화와 협력의 길』 (서울: 통일부, 2002); 통일부, 『대북 정책 추진 현황(종합 자료집)』 (서울: 통일부, 2002); 통일부,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서울: 통일부, 1999); 통일부, 『해설 자료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서울: 통일부, 1998).

한 장기적 희망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북한 지하자원이 약 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천조입니다.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동, 금, 석탄 등 깔려 있습니다. … 관광자원도 아주 풍부하지 않습니까. 북한 노동력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고교까지 의무교육에 군대에서 10년 교육받았고, 그러면서 임금은 중국 1/3이고 이런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하면 돈이 생기고 그때 철도 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갖추면 됩니다.”⁵²⁾

그는 이런 전망을 단지 남북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 차원의 미래 구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반도 주변 지역 차원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정착의 긍정적 결과가 공유되길 희망했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은 경제력에 있어서나, 인구 면에 있어서나 세계와의 무역량에 있어서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날로 더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장을 내다볼수록 동북아의 평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평화 없이 발전은 없습니다. 동북아 평화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전제조건이 됩니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가 이룩되면 중·미·일·러의 4대국은 물론 몽골까지 동북아지역은 안정 속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남북한과 중국의 동북 3성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⁵³⁾

교류 협력을 통해 과연 북한이 변화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 내부에서 시장화가 진전되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점차 좋아

52) 2008년 5월 13일 〈한겨레〉 창간 20주년 특별 인터뷰 『김대중 전집 I 제10권』, p. 391.

53) 2008년 10월 27일,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중국 인민외교학회와 랴오닝성 정부의 공동주최로 선양에서 열린 〈제2회 동북아지역 발전과 협력 포럼〉의 연설, 『김대중 전집 I 제10권』, p. 600.

지는 등 변화가 진행 중이며, 북한과 미국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미국이 북한에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며 개혁 개방을 도와줄 때 북한이 진짜 변할 것이라고 보았다.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그는, “북한이 핵탄두 몇 개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핵무기로 주민 밥을 먹이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⁵⁴⁾ 비핵화에 상응하는 개혁 개방 가능성을 확신했다. 북핵개발이 계속될수록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불신은 더 강화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핵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나갑니까?”라고 물으며 미국이 안전보장을 해주고 국교정상화해 국제사회에 나가게 해주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⁵⁵⁾

김대중 대통령은 타계하기 전인 2009년 6월 4일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아직도 대화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아직도가 아니라 영원하지요.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북한은 해나갈 힘이 없어요. 더구나 중국까지 화를 내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대하니까요”라며 결국엔 대화로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것만이 북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임을 낙관했다.⁵⁶⁾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과 미국이 결국엔 대화의 길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과 낙관을 유지했다. 군사력, 제제는 모두 실패했고 결국엔 대화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핵문제가 핵심입니다. 이거 해결되면 평화협상뿐 아니라 북미수교까지 다 됩니다. ... 미국이 처음엔 북한에 군사력 쓰려고 했는데, 지금 중동에 말이 묶여서 못했습니다. 다음에 일본이랑 경제제재 해봤는데 우리와 중국이

54) 『김대중 전집 I 제10권』, p. 520.

55) 『김대중 전집 I 제10권』, p. 755.

56) 『김대중 전집 I 제10권』, p. 753.

북한을 도와주니까 별로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화밖에 없는 것입니다.”⁵⁷⁾

이처럼 김대중은 독일과 베트남, 북한과 한국 권위주의 정부가 만든 기존의 통일방안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점차 멀어져가는 통일가능성과 그 긴 과정에서 마주할 복합적인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한국형 통일모델을 만들었다. 그것의 핵심은 3단계 통일론, 그리고 남북연합이었다. 또한 김대중은 평생동안 대면했던 다양한 비판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그가 수십 년간 바닥에서부터 쌓아올린 낙관주의를 끝까지 공유하고자 했다. 어떤 비관적 상황에서도 긍정적 해법을 찾아내고, 유연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갖고 정책을 지속해야 하는 험난한 길을 가는 하나의 모범적인 귀감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V. 나오는 말: 교훈들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화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지속되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갈등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방관과 비관여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국제문제와 외교보다는 국내 정치를 중시하는 미국의 공화당 정부와 적극적 관여보다는 상대주의에 입각한 전략적 대응을 해온 한국정부,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권력 승계에 골몰하고 있는 중국, 3대 세습의 혼란을 넘어서 병진노선을 완성하기 위해 전념하는

57) 『김대중 전집 I 제10권』, p. 285.

북한 모두에게 통일과 평화의 전망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중의 통일·평화사상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김대중은 한국의 현대사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다시 반복되기 어려운 역사적 경험의 표상이다. 김대중은 20세기 중반~21세기 초반의 시대상황에서 수십 년에 걸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키우고, 한국적인 통일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를 구상해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조금 더 비관적이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주목해야 할 김대중의 통일·평화 사상의 핵심적인 교훈은 분명하다.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 국제적 흐름과 비교적 관점을 통해 한국의 현재 상황에 맞는 정책의 모델을 창의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어떤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가능한 해법을 찾아내고 이를 이루어내려는 낙관주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 접수: 2017년 10월 31일 / 심사: 2017년 11월 1일 / 게재확장: 2017년 12월 1일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근식. “탈냉전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평화연구』, 18권 2호,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2010년 가을).
- 김근식. “햇볕정책 2년 : 평가와 전망.” 『통일시론』, 제7권 (2000).
- 김삼웅. “김대중의 정치철학과 사상 탐구.” 『인물과사상』 (2009), pp. 114~126.
- 김영미. “외교문서를 통해서 본 김대중 납치사건과 한·일연대.” 『한국근현대사연구』, 58 (2011), pp. 214~251.
- 김대중. 『공화국연합체』. 서울: 학민사, 1991.
-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세계사의 대전환과 민족 통일의 방략』. 한길사, 1993.
- 김대중. 『대중경제론』. 청사, 1996.
- 김대중. 『옥중서신』. 서울: 시대의 창, 2009.
-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1, 2』. 서울: 삼인, 2011.
- 류상영 외. 『김대중과 대중경제론』.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2013.
- 류상영 외. 『김대중과 한국야당사』. 서울: 연세대 출판문화원, 2013.
- 류상영 외. 『김대중과 한일관계사』. 서울: 연세대 출판문화원, 2013.
- 박태균. “실패한 통일의 신화들.” 『황해문화』, 37 (2002), pp. 59~72.
-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한울, 1995.
-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저작목록집』. 서울: 연세대 출판문화원, 2015.
-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1부』. 서울: 연세대 출판문화원, 2015.
-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연보 (1924~2009) I, II』. 서울: 시대의 창, 2011.
- 이경호. “김대중 정부 시기 대북정책과 국가자율성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47(1) (2007), pp. 191~213.
- 정근식. “정권교체, 민주주의 그리고 ‘광주.’” 『당대비평』 (1998), pp. 124~143.
- 정태환. “김대중 정권의 성격과 개혁정치 : 모순과 한계.” 『한국학연구』, 31 (2009), pp. 387~416.
- 정해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주의 극복정책.” 『내일을 여는 역사』, 37 (2009).
- 최완규. “햇볕정책의 국내정치적 제약요인분석.” 『동북아연구』, 제8권 (2003).
- 통일부. 『대북정책 4년 평화와 협력의 길』. 서울: 통일부, 2002.

- 통일부. 『대북정책 추진 현황(종합 자료집)』. 서울: 통일부, 2002.
- 통일부.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서울: 통일부, 1999.
- 통일부. 『해설자료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서울: 통일부, 1998.
-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2001-08: 제2차 정상회담 대비 남북한 통일방안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히태희·윤황. “민주화 이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성향 및 전략 비교 : 김대중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2(2) (2010), pp. 1-37.
- 홍석률.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역사적 평가.” 『내일을 여는 역사』, (37) (2009), pp. 26~38.

영문 자료

- Daniele Archibugi (2004), *Cosmopolitan Democracy and its Critics: A Review*,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0(3), pp. 437-473.
- David Held, *Democracy and the Global Order*, Polity Press, (Cambridge, 1995).
- Lee, Misook. “The Japan-Korea Solidarity Movement in the 1970s and 1980s: From Solidarity to Reflexive Democracy,” *The Asia-Pacific Journal*, Vol.12, Issue 38, No. 5, (2014).
- Lijphart, Arend, *Democracies: Patterns of Majoritarian & Consensus Government in Twenty One Count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 Lijphart, Arend,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Yale University Press, 2012).

일문 자료

- 鄭根珠 韓國民民主化支援運動と日韓關係：「金大中内乱陰謀事件」と日本における救命運動を中心に (後藤乾一教授退職記念号：アジアのなかの日本 日本のなかのアジア) 『アジア太平洋討究』 (20), 359~371, (2013).

Kim Dae-Jung's Peace and Unification Thought
: Democracy · Korean Unification Model · Creative Optimism

Kim, Hak Ja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Kim Dae-jung is the only president who found his own theory about the unification of Korea. He also holds a different position than other politicians because he was a politician with the most cosmopolitan and global network in contemporary times.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analyze and assess Kim Dae-jung's thought on Peace and Unification which he constantly tried to realize over the lifetime. The core values of his thoughts are, first, a democracy, the domestic political foundation of his theory of unification and peace. Democracy was a Grundnorm(Basic norm) all other ideas and policies for him. Second, he developed a Korean style model of unification, created by international senses and comparisons. To him,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d to be different from the unification of Germany, Vietnam, policies of North Korea and the South Korean authoritarian governments. The third is a creative optimism that created his own institutional design of 'state union'. He had a fierceness and optimism to challenge any difficulties he faces in the future. Kim Dae-jung represents South Korea's historical experiences which is difficult to be repeated again. In this regard, he left the biggest blueprint of the future of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Kim, Dae-Jung, Democracy, Korean Style Unification model, Creative Optimism, State Union.

김학재(Kim, Hak Jae) —————

김학재(金學載)는 197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Ph.D)했다. 베를린 자유대학 프리드리히 마이네케 연구소에서 지구사 연구 프로젝트 연구원(2011~2013)을 거쳐, 베를린 자유대학 동아시아 대학원 박사 후 전임연구원(2013~2016)으로 일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관문점 체제의 기원』, 『1950년대 생활 문화사』, 『The Quality of Democracy in Korea: Three Decades after Democratization』(공저) 등이 있고, 논문으로 “냉전과 열전의 지역적 기원”, “발틱의 월슨적 순간: 독립과 민주주의의 유산” 등이 있다.